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78회 임시회>

2009. 5. 1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동 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09년 5월 8일
2. 발 의 자 : 채명지, 방종영 의원
3. 개정 이유

○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은

-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 확대(안 제4조제3항)
 - 3분의 1 → 과반수 이상
-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안 제6조제1항)
 - 출석의원 과반수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 국외여행계획서의 홈페이지 공개(안 제6조제3항)
- 여행결과보고서 작성 제출(30일 → 15일 이내)
(안 제9조제1항)

5.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 관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09. 3.11)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및 예산 절감으
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
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국외여행
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

-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임
-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과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람

1. 기본 방향

-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 시 고려

2. 권고 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강화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 시 고려사항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억제

-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 억제
-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부여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요 이상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추가방문 자제
- 방문기관의 사정·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임기 중 특정시기 방문은 지양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고, 소요경비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지급

□□ 여행의 사후관리

- 공무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 홈페이지 게시 등 공동 활용
-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 이유

○ 군민상 수상자격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상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상의 위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은

가. 수상자격 기준의 구체화(안 제3조)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공고마감일 현재 달성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등록기준지가 달성군인 사람”으로 구체화

나. 군민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운영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

다. 수상자 결정방법 규정 및 군민상 위상 높이기 위한 규정 신설(안제6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9. 3. 30 ~ 4.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에 대하여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여하는 달성군민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수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제 정 이유

-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유사 목적 사업과의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은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승계
-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과거 저소득 마을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된 새마을 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최초 지원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금대비 운영 실적이 급감하였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유사목적의 사업과 달성군 여타조례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제도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대구를 포함한 6개 광역시 총 4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달성군에만 존치되고 있어, 휴면기금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활용 등 여타 방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게 여겨짐.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재산세의 부담은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9. 2.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고
-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 (안 제27조)
-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한 세 부담 완화 조정(안 제91조)

5.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최저 1천분의 1.5에서 최고 1천분의 5인 재산세율을 최저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로 개정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 하였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개정하는 것으로
-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개정 1998.12.31>)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삭제 <1988.4.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은

○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내 모든 구·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5.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취등록세, 자동차세의 감면신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내 모든 구·군에서 신청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적극적인행정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
3.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 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율을 일원화 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 요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일부사항 삭제(안 제5조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에 있어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 배제하고 건물건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 대부료 등의 요율, 감면 및 특례(안 제28조, 제32조, 제34조)

- 무허가 건물 포함한 주거 건물에 대하여 대부요율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 개정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 조정율을 동일하게 70/100으로 확대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40조제1항)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 제 6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34조, 제38조, 제8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율을 일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료 요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29. (생략)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 이유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폭넓게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학 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원 함에 있어 2009년도 설립된 장학재단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은

- 2009년도 설립된
(재)논공효천장학회, (재)구지면장학회를 추가함.

5.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군비 지원대상 장학회를 달성장학회 및 7개 읍·면 장학회와 함께 2009년 논공과 구지에 설립된 2개 읍·면장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관리과)
3. 개정 이유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4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청소업체 경영악화,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결과 인상권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일부를 인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조례 제7조 별표 1)
- － 수수료 인상율 : 정화조 기본 16.9%, 초과 7.1%, 분뇨 16.6%

5.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제47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난 15년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동결로 운송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와 최근 타 자치단체의 청소요금 인상과 우리 군에서도 수시로 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건의가 있었으며 분뇨 및 정화조 수거작업 중단으로 인한 민원까지 발생한 바 있고,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결과 청소요금 인상 권고조치를 고려해 볼 때 청소 요금의 일부를 인상함으로써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제178회 임시회 >

2009. 5. 1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정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3. 제안 이유

- 임진왜란 시 조선에 귀화한 김충선 장군을 모신 녹동서원을 한·일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일우호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대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은

-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 부지
 - 지 번 : 가창면 우록리 175-1번지, 175-5번지(2필지)
 - 토지면적 : 2,496m²
 - 재산가액 : 262,080천원 (산출내역 : 105,000원 X 2,496m²)

II. 검토의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충선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가창 녹동서원에 한·일우호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교훈 삼아 양국의 우호관계에 다소의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생략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